

# 특수재난의 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나간다



**박승주**  
행정안전부  
지자체협업담당관실 사무관  
wide@korea.kr

오퍼레이션 넵툰 스피어(Operation Neptune Spear)으로도 잘 알려진 이 작전은 2011년 5월 미국정부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위한 작전 명이다. 사실 국내에서는 작전명보다도 아래의 사진 한 장이 더 유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작전지휘를 관계자에게 전임하고 대통령 본인은 주변 관계자들과 상황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지상군 투입없이 폭격으로 사살하는 것을 고려하였지만, 빈 라덴이 은거한 아보타바드의 안전가옥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불과 56km 떨어진 곳이라 수도 방공권 내에 들어 있는 무인기를 이용한 공습이 어려웠고, B-2폭격기 2대를 이용해 2,000파운드의 폭탄 수십발을 투한한다는 계획안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주변에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었고, 빈 라덴의 사망을 확인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미 해군의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인 DEVGRU 대원 25명은 블랙호크 헬리콥터 4대에 나눠서 탑승하고 빈 라덴의 가옥을 기습공격했다. 헬리콥터가 순식간에 착륙함과 동시에 특수부대원들의 공격은 빈 라덴 경호원들의 공격을 무색하게 했고, 빈 라덴은 침실에서 사살 당했다.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작전은 전쟁을 방불케할 만큼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움직임을 요구하고, 작전 수행전까지 고도로 훈련되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인 특수부대원들이 투입된 것이다.

특수재난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자연재난으로 시작되어, 사회재난으로 확산된 Natech 재난의 대표적 상징이다. 해저지진으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은 건물붕괴와 대형화재 등의 1차 피해를 가져왔고, 아울러 지진으로 인한 대형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치는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수몰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상실로 인한 원자로 폭발이 발생하며 대량의 방사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3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망과 실종자가 2만명, 이재민 20여만명의 발생과 함께 인접국가로의 방사능 확산과 심각한 수자원 훼손 등 전 지구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견고한 내진설계로 지진에 대비했던 원전이 예상치 못한 침수정정으로 폭발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것은 기술에만 의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엔 공유의 사례를 살펴보자. 2008년 에어비앤비의 등장은 숙박업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금융위기로 미국경제가 흔들리던 시기이며, 은행 대출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높은 이자로 인해 집을 다시 뺏길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빈방을 내놓았고, 돈을 벌며 이자를 갚으며 집을 지킨 사례가 하나 둘씩 생겨나며 서비스 시작 2년 만에 숙박일이 100만일을 돌파하였다.

에어비앤비의 사례는 우리에게 익숙한 공유경제의 신흥탄이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1984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미틴 와이츠먼 교수가 펴낸 「공유경제 : 불황을 정복하다」란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2008년 하버드대의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지금의 공유경제 개념인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으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용으로 접목되고 있다. 이를테면, 과거 여행사의 천편일률적인 여행패키지 상품을 개인의 여행 경험을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특별한 여행상품으로 거듭나게 하는 개인과 개인이 다대다로 거래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 명의 여행 달인이 모두의 여행취향과 같은 여행지를 방문해서 또 다른 느낌과 만족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활용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 Special Report

공유경제에 대한 영역은 여행, 렌트카, 자전거, 페이스북 등 흔히 생각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은 그 유형과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재난과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도 너무 다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소수의 전문가가 만든 정책에 의존하여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재난 발생시 범국가적 위기와 다부처 공동대응이 필요한 특수재난(감염병, 가축전염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원전사고, 공동구사고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재난의 유형도 다양하지만 재난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체도 너무 다양하여, 1명의 공무원에게 모든 대책을 세우도록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사회가 점차 고도화, 복잡화 되어갈수록 우리가 규정한 사회재난 역시 대형화, 복합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특수재난은 갈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다른 재난에 비해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문성과 그리고 그 전문성을 공유할 때 풀기 어려운 특수재난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과거 국민안전처에서는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35명을 2016년 8월에 신규 위촉하였고, 민간단체 15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수재난 대비체계를 강화해 왔다.

지금 행정안전부 특수재난협력관실은 과거 1기 활동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2기 전문가기동단을 준비하고 있다. 감염병분야, 가축전염병분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분야, 원전사고분야, 공동구사고분야, 특수재난관리 총괄분야, 사고조사분야 등 7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실 분을 모시고 분야별 다양한 재난숙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특수재난이라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더 많은 재난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되며, 한 가지의 문제를 10명이 풀 때 한 문제가 아닌 10가지 재난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안전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확신한다.